

동아시아 기후 매거진

제3호 2011년 11월 발행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사무국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 82+(0)62+514+2470 전자우편 kwangju@kfem.or.kr

배출권 거래제, 기업과 손잡은 '녹색성장' 쇼!

얼마 전 환경연합을 방문했던 독일의 CDM 컨설턴트가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모조리 개최하려 하는데,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상하다며 물었다. 글썄, 그게 정말 이상하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초에 나온 입법 예고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그나마 12월이 되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배출권 거래제는 태생적으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거스르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규제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방식이다. 이미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무상할당이 많이 이루어져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가 하면,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지역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VAT를 포함해 배출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탄소 시장 참여자가 500곳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배출권 거래제는 무상할당 정도 등의 세부 디자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축목표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20년 BAU대비 30%의 감축목표를 제시했지만, BAU(Business As Usual)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2030년 국가에너지 수요전망치는 2008년 발표치보다 13.4%나 증가했다. 2년 동안 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국제 유가는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전망이었다.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터이다. 이처럼 BAU는 특정 업종과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할당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기준을 교토의정서 발효 시점인 2005년 기준으로 하든지, BAU 산정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객관적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액 유상으로 하고 건물, 병원, 대학 등의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등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12월 국회에 상정예정이라는 배출권 거래제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만 나온다. 무상할당 비율은 애초 90%이상에서 95%이상으로 확대, 산업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애초 배출권 거래제 관련 수익으로 기금조성안에서 세제 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으로 업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한 안으로 후퇴했으며, 도입시기도 업계의 요구에 따라 애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또한 '민간업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할당시 고려하는 초기 안에서 계획수립시 고려로 후퇴하더니, 7월에는 '제외방안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쯤 되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배출권 거래제를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헛갈리게 된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웠으니 국제적으로 그에 걸 맞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는데, 정책 국내에서는 정부와 손잡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하다보니 벌어진 상황이다. 즉, 한국에서 실시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도 그 무엇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총감독한 '녹색성장'이란 시리즈 연극의 한편에 불과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이 달라짐을 체감하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결국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중일의 시민들이 이 연극의 관객으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글=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한국

중국

이보

도시, 인류의 운명을 바꾼다

광주 NGO 글로벌포럼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



다소 가창하게 제목을 잡아보았다. 그러나 과장된 말은 아니다. 전 세계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소비함과 함께 주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먹거리를 공급받아 매일 많은 식량들을 먹어치우며 도시는 생존해 가고 있다.

주변지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끊어진다면 도시는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광주에서는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NGO들이 준비한 NGO 글로벌포럼이 열렸다. 도시에서의 에너지, 식량의 새로운 전환만이 지구의 가장 큰 화두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지구정책연구소장인 레스터 브라운의 기조강연과 인류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재단의 최철대표의 기조강연 이후, 국내외 환경활동가들과 시민 전문가들은 두가지

주제인 에너지와 식량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도시,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다”를 주제로 한 에너지 섹션에서는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발표와 부파탈연구소가 연구한 2058년 탄소제로도시 문헌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백년배교수의 한국의 지속가능한 전력 시나리오, 우에조노 박사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일본의 도시에너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에너지의 전환이 가능하며, 특별히 고도의 기술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 지금 있는 정책의 적극적 도입과 행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탄소 제로도시, 에너지 혁명, 탈핵 정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도시의 먹거리선택, 지구의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한 식량 섹션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후변화를 막기는 사실 어렵다며, 육류소비 줄임으로써 먹거리의 전환, 농업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단시일내에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로버트 쿨랜드박사의 발제와 대규모 GMO를 이용한 농업이 아닌 소규모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계유기농연합의 발표와 채식하는 목요일 캠페인을 통해 지구환경, 건강, 일자리 등을 해결한 벨기에의 사례가 발표되었고,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과 광주의 먹거리 운동의 역사가 발표되었다.

이번 NGO글로벌포럼에서는 에너지와 식량의 전환을 위한 그 밑바탕에는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함을 공감하였다. 올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핵발전, 핵에너지에 대한 위험성이 여실히 증명되었고, 한순간의 방사능 사고로 인해 농업과 먹거리, 인류의 모든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현재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서의 탈핵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과 한국정부, 중국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인류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와 식량의 전환을 위한 시민의 노력에 반하는 국가 정책으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실제 핵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혁명과 전환, 먹거리의 전환을 통한 탄소 자감을 통해 뜨거운 지구를 시민의 노력으로 식힐 수 있다.

글=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극장

저탄소사회로 가기위한 지자체의 새로운 모색

광주시 '탄소은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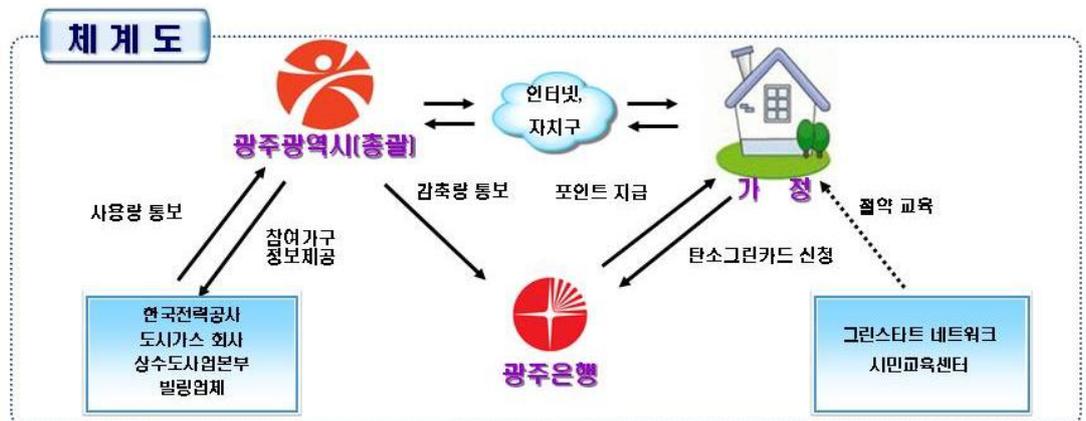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써 자연 질서에 순응하던 때 지구는 극히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자연의 품을 벗어난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는 어느새 우리 삶의 근원에 지울 수 없는 상처기를 남기더니, 마침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존재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폭우, 폭염, 한파, 지진해일 등 기상이변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재해재난의 발생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을 이 시대 최대 화두로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광역적이며 비가역적 성격을 지녔지만, 이에 대처하는 인간의 의지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내지 최소화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은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협력체계가 잘 녹아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제도'가 있다. 광주시 온실가스배출의 특성은 가정상업부문(47%)의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탄소은행제는 가정에서의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정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였을 때 광주시는 각 가정의 연간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광주은행에 통보한다. 그리고 광주은행은 이를 탄소그린카드에 적립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에너지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 발생량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6만 가입세대 중 4만4천여 세대가 에너지를 절감하여 1만2천 톤의 CO2를 감축, 8억8백여 만원의 탄소포인트를 각 가정에 적립했다. 2011년 6월 현재 154만의 광주인구 중 19%에 달하는 10만4천여 세대가 탄소은행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탄소은행제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삼자가 서로 윈(Win)할 수 있는 민간지역은행의 파트너십 형성과 광주시민들의 뛰어난 공동체 의식 그리고 교육을 통해 배출된 '탄소코디네이터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사용상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절감방안을 진단해주는 등 홍보에 있어 창조적 발상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카드의 신규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거부감이나 협소한 포인트 사용범위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이 밖에도 탄소기금 마련이라든지 친환경적 소비활동을 통한 탄소포인트 지급 등 여러 각도에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러한 불편함을 통한 효과체감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혜택도 매우 간접적이다. 이것이 바로 온실가스감축과 시민실천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진정한 환경보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는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은 작은 실천이 종국적으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도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민과 공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제'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오늘날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글=박홍표/광주광역시청 기후변화대응과 과장



중국 탄소거래 개론

기구의 설립

2008년 중국 최초로 3개의 환경권역거래기구(베이징 환경거래소,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 친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었다. 2009년은 중국의 저탄소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한 해로서 중국의 환경권의 거래기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산시루량(陝西呂梁)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축 거래중심”을 비롯하여 우한(武漢), 항저우(杭州), 쿤밍(昆明)에서도 거래소들이 생겨났다. “선전(深圳)연합산권거래소”, “선전(深圳)국제에너지환경기술혁신센터” 그리고 홍콩의 “RESET”이 연합하여 발주한 “아시아 배출권 거래소” 또한 2009년 11월 17일부터 문을 열었다. 그 외에도 다롄(大連), 귀저우(貴州),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지의 거래소 또한 준비 중에 있다.

표준의 설정

“베이징환경거래소”가 주도하여 정한 “펜더표준”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이는 중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낸 최초의 배출량 감축표준이다. “펜더표준”은 자발적으로 배출량감축공정 평가기구, 규칙제정 등의 내용을 규정 함으로서 중국의 탄소배출량 거래시장의 메커니즘 완성도를 높였다.

지방에서의 실험

중국은 “중국 경제발전 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기간 동안 전국의 GDP 대비 에너지소모 의 비율을 16퍼센트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책임과, 능력, 잠재력, 난이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둥성(广东省)을 에너지 절약의 선봉장으로 지정하고 감축비율 18%를 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광둥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광둥성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에서 출발해서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더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12·5”기간 동안 광둥성은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과 배출량감소를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둥성에서는 전력과 건설자재 등의 업계를 우선적으로 탄소거래 시범단위로 선정하여 업계간 그리고 지역간 탄소거래에 대해 시험해볼 예정이다.

정책의 방향

“12·5”기간동안 중국은 탄소배출량거래를 시험해보고 이를 토대로 점차 탄소배출거래 시장을 형성해 갈 계획이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대책을 담당하는 한 관리는 베이징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후베이(湖北) 그리고 광둥에 탄소거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년에는 탄소거래소를 전국적인 범위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탄소거래 규모는 각 성시의 에너지 소비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 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성(省)들의 “탄소강도”(탄소배출량/GDP)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전국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건설하는 작업의 시간표는 아직 확실하게 짜여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책을 담당하는 관리 쉬웨이(苏伟)는 올해 6월 탄소배출권거래소 시범단위들의 일정이 시작되었으며 중국 탄소배출거래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NGO의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소 발전에 대한 건의 탄소배출권거래는 완벽한 제도의 설계를 통해 “탄소유출(제도적 허점)이 생기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설계하여 기업, NGO 등이 정책 제정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려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수치조사와 감시측정 체계를 설립하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글=비산신(毕新欣) CCAN

한국

중국

<녹색생산촉진법>의 소개와 현황 NGO의 중국 기후변화입법 참여를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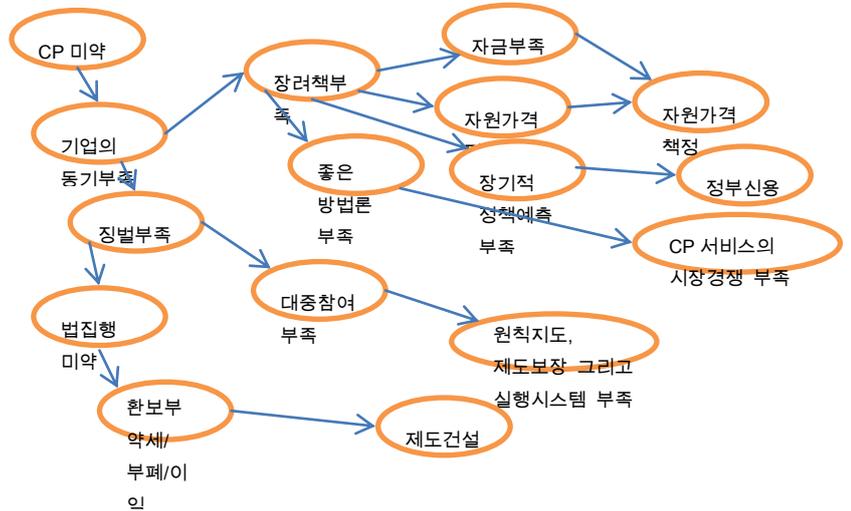
<녹색생산촉진법>(이하 <촉진법>) 200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본래 강압적인 법률은 아니었다, 이 법의 제1장에서는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벌금의 액수가 비교적 작거나 다른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촉진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녹색생산을 정의하는 것이다. <촉진법>은 주관부처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경제무역위원회체계의 지도, 환경보호체계의 감독). 하지만 조문 중 대다수는 원본적인 지도건으로서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세칙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에 대한 설명도 없어 단순한 설명서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2003년 이래로 국무원 및 관련부처는 차례로 <녹색생산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의견>,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의 종합적추진방안>, <녹색생산이심의 임시시행법>,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조례>, <공업 통신업 영역의 녹색생산 촉진업무의 통자>등 여러 부처의 정책과 법규를 통해 <촉진법>의 실행을 도왔다.

2010년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았든 바로는 7년의 시행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겨우 0.15%의 기업만이 녹색생산 작업을 실천했다고 한다. 게다가 "녹색생산작업"이 비교적 잘 시행된 지방에서조차 기업이 자발적으로 녹색생산 심사를 마친 수는 규모이상 기업의 10%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어떤 상(省)에서는 겨우 20개 남짓한 기업만이 녹색생산 심사를 받았다.

"나라는 심각하게 중요시하고 있고, 지방은 대중 일버무리며 기업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조별 심의에 참여했던 주용신(朱永新)위원의 한마디가 현 상황을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 '환경보호부' 등이 각기 다른 평가, 생산기준을 발표하여 표준과 원칙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검사와 징벌제도 또한 부족하여 결국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녹색생산촉진법의 많은 조항은 구호에 지나지 않아 제도적 성격이 많이 부족하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창지문(常纪文)씨는 법을 고쳐 녹색생산정보체계와 기술자문서비스, 기술연구와 성과전환 그리고 제도보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제도의 설립 이외에도 다른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장려정책의 실시와 기술개발자금지원 등이 있을 수 있었다. 녹색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이하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었다. 위로부터 정책이 기업의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징벌의 문제이다. 이는 법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중 참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두 문제는 원래부터가 녹색생산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체계건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인센티브 부족의 문제이다. 자원의 진정한 가치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법을 지킬 때 드는 비용이 법을 위반할 때 드는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촉진법>이 제정될 때 시행측면의 관건이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규범 짓지 못했다. 이 법이 단지 "촉진하는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이 기후변화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후변화라는 모든 방안을 망라하는 주제에 대해 우리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범(이는 다른 법률들과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모량과 배출량을 국가의 비밀로 삼지 않고 기업이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행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다스리는 입법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공간에 대하여 가격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금의 사용을 감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소송 법률을 참고하여 대중이 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글= 천지량(陈冀良) CCAN

중국의 기후 에너지 단체

자연의 친구

自然之友  绿色论坛

자연의 친구는 1994년 만들어진 중국 최초로 민중생태분야에 등록된 민간 환경보호단체 중 하나이다. 10여 년간 자연의 친구는 회원 1만여 명을 받아들였고 이 중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3000여명, 단체회원은 30개 정도 이다. 자연의 친구는 국내외에서 각종 상 24개를 수상했다. “아시아환경상”, “지구상”, “팬더곰상”, “녹색인물상” 그리고 필리핀의 雷蒙·麦格赛赛奖 등이 그것들이다.

취지와 사명

대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건설, 환경보호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함.

중점업무

환경보호영역에서 대중참여 메커니즘이 형성되도록 추진, 약자들의 소리를 대변하여 공공환경정책에 관여, 환경교육활동을 통한 대중의 환경의식 강화로 대중의 행동의지와 능력을 제고시키며 녹색 생활방식을 갖도록 함, 환경 NGO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힘을 집중함, 풀뿌리 환경보호역량을 발전 성장시킴, 건전한 회원제도를 설립하고 인정적으로 회원을 발전시킴, 평가가 명확하고 체계가 합리적이며 협동이 잘 되며 사회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민간환경보호단체를 구건 함.

우리의 프로젝트

중국 대중사회 기후변화 대응 공공연구 프로젝트:

블로그를 통해 국내외 매체들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한 보도를 공유한다, “실시간 중국환경보호 NGO”의 우편부서를 통해 민간환경보호단체의 <입장>(초안)에 대한 의견과 联合署名(을 모집한다, “텐진기후변화협상”과 “칸쿰 기후변화협상” 기간 중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제론회 (解振华) 부주임과의 대화에 참가한다, 60개 이상의 사회조직이 “UN 기후변화협상

텐진회의기간”에 모습을 보여 중국 대중사회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교통 프로젝트: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베이징 지하철 연선의 자전거 사용현황에 대해 연구를 실시, 자전거 서비스지도를 완성하였다. (<http://fon.org.Cn/bbb/bikemap.html>), 자원자들과 비차니우(比车牛, Smarter than car)는 공동으로 <살기좋은 베이징을 위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최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저탄소출행을 5명의 지인들에게 전파할 것을 약속했다. 30개가 넘는 국내외 매체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활동들을 주목하고 보도하였다.

연락처

주소: 北京市东城区青年湖西里5号楼4层 100010

전화 : 010-65120827-815

이메일 : zhenghehe@fonchina.org

홈페이지 : <http://www.fon.org.cn/>

일본은 '탈원전'으로 갈 수 있을까?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

탈 원전을 표명한 칸나오토 수상이 퇴진하고, 노다 요사히코씨가 정권 자리에 앉았다. 새 정권의 역할에 대해 “지진 재해 복구부흥, 원전사고 조기수습, 경제재건을 내건 노다 수상이지만, 탈 원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9월22일 UN 연설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원자력에너지를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해, “탈 원전”을 당장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을 밝혔다.

노다정권 발족에 따라, 경제산업성(省)에 취임한 하치로씨(당시 원전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었음)는 기자회견에서 “원전 0” 를 명언했지만, 며칠 후 피해지역 방문 때 했던 망언으로 퇴임하고 말았다.

10월에 들어,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는 기본문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작년 6월에 개정한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원전을 추가로 13기 증설한다”는 부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재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전력회사 임원은 안 들어가고, 처음으로 탈 원전 파 우원이 선출되었지만, 위원장은 산업계 출신이자, 교토 의정서나 에너지 정책 변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무라 아키오씨(신일본제철 회장)가 선출되었다. 탈 원전파 우원인 이이다 테츠야씨는 “탈 원전을 위한 위원회로서 그 정통성이 의심된다”며, 에다노 경제산업성 장관에 대해 위원회에서 탈 원전을 전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탈 원전에 대한 정치적 흔들림은 원전이 입지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사가현(佐賀県)에서 벌어진 “매일 배후조종 문제”다. 사가현에 있는 건카이원전(장지중) 재가동을 위해 경제산업성이 6월26일 지역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프로그램에서, 큐슈전력이 관계회사 직원에게 일반시민으로 둔갑해서 재가동을 지지하는 의견 메일을 보내 중계 될 수 있도록 의뢰했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사가현 후루카지사가 오히려

방송5일전에 재가동을 지지하는 의견메일이 필요하다고 큐슈전력 간부에게 전한 것이 밝혀졌다.

이후 큐슈전력이 설치한 3자위원회는 “그것이 매일 배후조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후루카와 지사는 이오에도 “재가동을 막는 국가적 리스크로 우리측은 것은 칸나오토 수상의 행동과 발언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칸수상에 대한 후루카와 지사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다.

이후 7월말에 “매일 배후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큐슈전력 마나베 사장이 사임을 밝혔고, 8월에는 후루카와지사가 매일 배후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발언은 경솔했다고”고 사죄하였으나 지역신문 등으로부터 지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현의회(県議会)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큐슈전력으로부터 개인헌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사임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9월에 들어 칸수상이 퇴진하고 노다정권이 발족하자마자 상황이 일변했다. 10월에 큐슈전력이 매일 배후조종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경제산업성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제 3자위원회는 후루카와지사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의견은 무시되었고, 사임을 표명했던 마나베 사장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3자위원회 위원장은 후루카와 지사의 책임이 명백함을 시사했지만, 지사는 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사건에 대한 사죄와 그에 따른 사임표명을 취소하는 지사의 강경자세 배경에는 탈 원전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칸수상의 퇴진과 탈 원전에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노다정권 발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지사가 중립을 주장하면서 재가동을 전제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지금, 누가 주민의 편에 서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말인가” (『사가신문 : 佐賀新聞』 8월24일 논설)





그러나, 탈 원전으로 가는 움직임을 멈추자는 안 된다고 6만 명의 시민이 집결하는 큰 집회가 9월19일 동경도내에서 개최되었다. 이 “GOOD BYE 원전 1,000만인 액션 대집회”는 저명한 문화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참여를 호소했고, 당초 5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당일 집결장소인 메이지 공원은 여상을 웃도는 수의 시민으로 매워졌다. (사진 참조) 대회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에서는 대회장소로 향하는 시민들의 긴 대열이 형성되었고, 대회장소에 미처 못 들어가는 시민들도 많았다. 저명한 작가 오오에 겐자부로 발기인은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는 핵발전소에 저항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상상력도 지식도 없는 정치인들, 경단련(経団連) 실력자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집회 참가자 수는 주최측 발표로 6만명, 일본에서는 근년에 보기 힘든 시민들의 집결력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이것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NHK가 당일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시민과 의원들의 협동 이니셔티브인 “에네시프 JAPAN”이 8월에 의원회관에서 연합학습회에서 사회학자인 미야다이 신지씨(宮台真治氏, 수도대학동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너지시프트는 이 나라의 가버넌스(통치기구)문제다. 단순히 원전이나 화석연료에서 자연에너지로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가현 큐슈전력 메일 배후조정 문제”를 감안하면 미야다이씨의 발언도 납득이 간다. 결국은 이 국가의 정치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시민운동 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총량 배출권 거래제로 돌아가라!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회

지구환경소위원회 정책수법 워킹 그룹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개별기업 업계의 목표를 상향식으로 쌓은 것을 산업계 전체 목표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배출량 거래제도의 큰 특징인 “삭감량의 확실성”이라는 점을 희생시킨다. 환경성(省)에서의 검토도 포함해서 배출량거래제도에 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삭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감이 있어 정부가 제도 검토중인 배출권 거래제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일본전체 목표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향식” 방식의 경우, 개별기업이나 업계의 사정을 반영하거나 기술 현황과 전망을 감안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목표 형성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전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배출 삭감량(2020년까지 90년대 비 25%삭감)과는 적합성이 없다. 그리고 일본전체에서 필요한 삭감량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상향식 방식으로 쌓아 올린 것을 그대로 목표로 삼는다면 나머지는 다른 부문에서 삭감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계 외 배출부문(주로 운수, 가정 업무부문)에 대한 필요 삭감량과, 정부가 크레디트(신용)로 해외에서 사온 양을 사실상 정하게 된다. 그래서 산업계의 자주적인 목표설정엔 타 부문에 있어서 자주적인 목표를 결코 의미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목표설정 방식으로써, 총량 삭감을 꼭 보증하지 않는 원단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책임의 소재가 애매한 업계 단위에서의 목표설정을 인정할 것도 시사되고 있다.

그래서 ‘상향식 방식’은 배출량 거래제도의 이상형인 배출권 거래제도 방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현행 경단련(経団連) 자주 행동계획의 연장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설계에서는 상향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배출량거래제도의 목표와 비추어 볼 때 총량(대상부문 전체의 삭감 목표)는 원칙적으로 하향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정부의 검토경과

지금까지 배출량거래제도에 대해서는 환경성(省)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부회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소위원회(이하 거래제도 소위원회)과 경제산업성(省) 정책수법 워킹그룹에서 검토되어 왔다.

환경성(省) 거래제도 소위원회에서는 3가지

옵션안(A· B· C) 이 제시되었다.

환경성(省) 및 경제산업성(省)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 중에서, 배출량거래제도의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 것은 환경성(省)이 제시한 옵션A다. 그러나 환경성(省)으로는 옵션B에 더 중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옵션B는 최대 배출부문인 전력부문이 원단위 규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삭감에 불확실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번 경제산업성(省) 정책 수법 워킹그룹 안에서 나온, 대상부문 전체의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원래 배출량거래제도는 1)삭감량이 확실하다, 2)대상부문 전체로 제일 비용 효율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3)배출량을 관리하는 carbon management 를 침투시킬 수 있다, 등의 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책 관점에서 “삭감량의 확실성”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면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는 이점을 원천적으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에 배출량 거래제도가 포함된 것은, 목표로서의 “25%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 본래 목적으로부터 생각하면, 배출량거래제도의 제도설계는 확실한 삭감달성을 중요시하는 배출권 거래제도형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결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배출권 거래제도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의 기후 에너지 단체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일본



WWF JAPAN?

WWF는 “인류가 자연과 조합해서 사는 미래를 이상으로 걸고, 약10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전단체이다.

1961년 9월 WWF는

멸종위기에 야생동물을 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생태계 보전에 활동범위를 확대했고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현재는 온난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WWF JAPAN은 1971년 세계에서 16번째로 동경에 설립되었다. 일본인에게 친근한 자연 속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자연관을 통해, 일본국내 및 일본이 관계하는 국제적인 문제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재생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대기, 삼림, 토지, 해양 등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은, 과다하게 이용하면 재생할 수 없게 되거나,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린다. 자원 이용은 고갈이나 붕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는 그 이용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20%의 사람이 80%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그 20%에 포함되며 특히 목재, 수산물 이용은 세계 굴지이며, 기타 자연자원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자원 이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래 세대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만큼의 자연자원을 누릴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WWF JAPAN은 일본 내 자연자원 이용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환경오염 그리고 자원 에너지

현대 일본인의 생활은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사회는 자연환경 오염과 열화,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피해라는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량 소비사회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의 영향을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부의 영향이 중대하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설사 문제의 인과관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방적인 조치가 취해줘야 한다.

동시에 사회 구조 자체가 환경부하가 적은 것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환경부하가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고, 또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에 배려한 활동이 평가되고, 성장에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WWF JAPAN은 행정과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일본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WWF의 역할

WWF JAPAN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실태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WWF JAPAN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마다 타깃을 정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해 행동한다” 를 스스로의 역할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WWF JAPAN이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다. 다양한 그룹 및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WWF JAPAN은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내외 환경보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WWF JAPAN 웹사이트

<http://www.wwf.or.jp>